



세계경제 역학의 변화와 축산물 수입 개방문제

허 신 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연구위원

I. 새로운 **變化**의 바람과 물결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어난다. 작은 바람에
는 작은 물결이 일어나고, 큰 바람에는 큰 파
도가 일어난다. 물론 태풍이 몰아칠 때에는
성난 파도와 함께 많은 人命과 재산의 피해
가 일어나기도 한다. 그런데 지금 세계경제계
에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기 시
작하였다. 그 바람이 西歐社會에서 일어나 태평
양을 건너서 일본과 한국 그리고 중공을 잇는
동북아시아지역을 향해 불고 있다. 이 바람이 우
리나라의 축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
해서 알아보려면, 먼저 바람의 내용부터 파악해
야 한다.

최근에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한 것
은 「地球村 이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바람」이다. 좀 더 잘살아 보겠다고
벼르는 인간의 무한한 욕구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교통과
통신의 수단이 발달되면서 국가간에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국가간에 부존된 자원
이 서로 다르고 자본과 기술수준마저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貿易」이 곧

國富의 한 수단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
렇지만 세상에 수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고
자 하는 나라는 없다. 모든 국가가 자기 나라
의 상품을 많이 수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기에 「수출증대」는 곧 「수입확대」와
직결되고, 많이 팔기 위해서는 남의 나라 상품
도 많이 사주어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처럼 地球村에 있는 국가들이 서로 잘살
기 위해서 닫혔던 국경의 문을 열고 교역에
열을 올리고 있으니 세상은 자연히 개방화의
바람에 휩쓸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요즈
음에는 날렵한 장사꾼들마냥 수출시장을 확
대시킬 목적으로 소수 품목이 수입개방이라
는 미끼를 던지고 상대 국가의 보호장벽에
구멍을 뚫을려고 노력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무역형태도 각자지로 발전하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보호의 장벽이 높은
것일수록 상대 국가의 목표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부 농산물도 이와 같은 목표물
속에 포함되어 있다.

바람은 또 다른 바람을 냉고, 물결은 또 다른
물결과 이어지듯이 地球村이 하나로 통합
되면서 알빈 토플러가 말한 소위 제3의 물결

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공업화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공업화를 지향했던 많은 국가들이 융성 발전하였고, 자원이 빈약한 일본까지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였다. 오랜 역사의 수렁 속에서 「후진국」의 딱지를 한번도 면하지 못했던 한국마저 공업화의 기적을 놓게 되자 중공을 비롯한 인구파악 국가들이 서로 앞을 다투어 공업입국을 서두르고 있다.

공업화의 물결은 소비구조의 변화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농산물, 임산물, 광산물 등 1차산품에 대한 소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서 2~3차산품과 기타 서비스에 대한 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업화를 추구하는 국가의 판매 시장은 확대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1차산품을 특화해서 주로 수출하는 국가들의 경제전망은 별로 밝지 못하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2~3차산품과 서비스 부문의 생산을 특화하여 주로 수출하는 국가들의 경제전망은 밝아지게 되리라고 하는 추리가 가능해진다.

1차산품의 생산을 특화하는 것이 유리한 국가는 부양인구에 비해서 토지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나라, 예를 들면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등을 포함시킨다. 반대로 제조업의 생산을 특화하는 것이 유리한 국가는 주어진 토지자원에 비해서 부양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나라, 예를 들면 한국, 일본, 중국 등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세계의 경제력 중심이 西歐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설이 현실로 나타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시각에서 한국경제의 발전발향을 조명하

게 되면 결국 우리 나라는 대부분의 국민이 잘살기를 원하는 한, 공업화를 지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우기 얼마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소위 3低時代, 금리 및 유가와 달려가치의 하락(일본 엔화상승)을 맞이한 한국경제는 순풍에 뚫을단듯이 예상외로 잘풀려 나가고 있다. 모처럼의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수출촉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지금, 그 역풍도 대단하게 거세지고 있다. 두터운 보호장벽 아래서 좀처럼 개방될 것 같지 않던 담배의 수입이 자유화되는가하면,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농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 주었던 소값파동의 소용돌이가 채 가시기도 전에 쇠고기의 수입자유화 마저 거론되고 있으니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얼마나 거센 것인지 피부로 느끼고도 남음이 있다.

II. 축산업의 현주소와 수입개방의 어려움

국내외적으로 개방화의 물결이 넘쳐 흐른다고 해서 이제 발전의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축산업을 하루 아침에 개방시킬 수 있는 것인가? 어떤 산업이나 품목을 개방시킨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소득수준이 개방 이전의 상태보다 더 향상될 수 있다고 하는 대 전제가 성립할 때 비로소 경제적인 합리성을 갖는다. 다시 말해서 쇠고기나 우유의 수입을 개방하려면 비육우 농가나 낙농가가 축산업을 떠나 다른 산업에서 더 많은 소득을 획득할 수 있는 여건이 사전에 조성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실업자 문제가 발생, 사회적 불안이 조성될 수 있다.

특집 : '86 낙농 육우 세미나

한국축산 발전의 기회를 주라고 말한 것이 생산의 경제성을 떠나 무조건 완전한 국내자급을 서두르라는 의미는 아니다.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정비해야 된다는 말이다.

그러면 문제의 핵심은 우리나라가 완전고용 상태에 놓여있느냐 하는데 있다. 일류 대학을 졸업한 학사출신들이 상당수 아직도 취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을 떠나서 한우나 젖소를 기르던 농민들이 과연 어떤 직종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심각한 현실 문제로 남는다. 따라서 축산물의 무분별한 개방은 자칫 대다수 양축가들의 생존문제와 직결될 수 있다.

축산물의 수입문제를 성급하게 다룰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축산업을 내다보느 시각의 차이에 있다. 지난 4천년간 경험해 나왔던 생계농업의 과정에서는 주로 곡물을 직접 소비하는 경종농업이 지배적이었지만, 1960년대 이후 공업화의 추진과 함께 국민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가축을 통해서 곡물을 간접 소비하는 축산업의 개막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기에 한국축산은 불과 20년 안팎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업처럼 급성장하는 경이적인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은 자본과 기술 그리고 경험의 축적이 부족한 관계로 한국축산업이 선진국의 축산업과 경쟁하기에는 너무나 뒤떨어져 있다. 그래서 역사가 짧은 한국 축산업계에 최소한의 발전 기회를 주는 것은 공평한 처사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축산에 발전의 기회를 주라고 말한것이 생산의 경제성을 떠나 무조건 완전한 국내

자급을 서두르라는 의미는 아니다.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정비해야 된다는 말이다. 효율적인 생산기반을 정비하다보면 생산량이 늘어나는 수요에 미달될 수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축산물의 수입을 완전하게 개방하느냐 전면적으로 억제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생산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축산물을 국내에서 공급할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농가 소득을 얼마나 증가시킬 수 있느냐에 모아진다. 결국 정부가 축산물의 수입을 단기간 안에 완전하게 개방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축가들이 경영개선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양축가들의 경영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과제는 한국 축산업뿐만이 아니라 국민 경제의 성장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축산물의 수입을 성급하게 자유화시킬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세계식량경제의 구조적인 변화에 따른 식량파동이 멀지 않은 장래에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본, 한국, 대만, 중공 등을 잇는 세계적인 공업화의 바람과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 대농업국들의 농산물 수출경쟁력의 강화라고 하는 두 개의 물결이 10년 안팎에 서로 부딪치게 되면 식량파동은 불가피해질 것이다. 공업화를 추구하는 나라들이 식량생산기반에 대한 투자

확대를 꺼리기 때문에 이를 공업국의 식량수입량은 매년 늘어날 것이다. 동시에 소수의 대농업국에 의한 식량수출량도 확대되겠지만, 이들 경제는 소비구조의 변화로 멀지 않은 장래에 침체를 면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면 대농업국이 공산품의 수입과 농산물의 수출이라고 하는 두 개의 거대한 카드를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때 한국과 같은 공업국이 입게 될 피해는 공산품 수출과 농산물의 수입 의존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해외 의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피해는 커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대비하여 농업생산기반을 확고히 다져둔다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다. 기왕 농업생산기반을 다지게 된다면 성장일로에 있는 축산업의 현대화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II. 우리의 대응자세

오늘날과 같은 과도기에는 양축가보다도 정책당국의 확고한 비전제시가 더욱 소망스러워진다. 그만큼 정책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보면 양돈과 양계산업은 생산의 유리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오히려 이들을 수출전략산업쪽에 포함시켜서 더욱 개발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고, 비육우와 낙농의 경우에는 한국적인 개발모형을 도입하여 대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정책적인 차원에서 볼 때, 문제는 비육우와 낙농업의 방향설정에 있다. 한국축산의 발전역사가 20년 안팎으로서 매우 짧지만, 지나온 개발속도로 봐서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외적인 경쟁력을 갖는 축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토지의 이용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미개발된 야산과 밭 그리고 천수답을 포함시켜 목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물론 이런 노력은 농지제도의 개선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양축규모를 확대시킬 수 있는 축산의 기반조성이 없이 축우산업의 육성을 논의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배합사료에 의존하고 있는 도시근교의 낙농이 성행하는 한 생산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다. 소위 「운동장 축산」을 탈피하지 않는 한 수입개방화의 물결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생산기반의 확대조성을 위한 일대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줄로 안다.

정책적인 차원에서 도 중요한 것은 가축개량을 중심으로 한 기술의 혁신이다. 10년 안팎의 급성장 속에서 기술의 축적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지만, 이제부터서라도 기술혁신에 박차를 가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물론 기술혁신은 개별 양축농가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과다한 비용과 이용의 학산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기술혁신은 공공기관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이 옳다. 최근에는 유전공학과 같은 첨단기술이 실용단계에 이르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술을 적극 개발하여 양축가들이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해놓아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양축가의 자질과 능력이 결여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산업의 성장발전이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축우산업의 육성은 바로 양축인들의 능력과 노력에 달린 것이다. 따라서 양축인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전파하고 과학적

특집 : '86년 농육우 세미나

그러나 빠뜨릴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는 개방화의 물결이 밀려올 때 어떻게 하면 대외적인 체면을 세우면서 축산물의 수입을 극소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방안을 모색해 두는 일이다.

인 사양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실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모든 양축인들이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할 것이다.

정책당국에서 할 일이 많기도하지만, 그러나 빠뜨릴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는, 개방화의 물결이 밀려 올 때 어떻게 하면 대외적인 체면을 세우면서 축산물의 수입을 극소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방안을 모색해두는 일이다. 양남배의 수입 자유화에서 보인 국민들의 소비억제와 같은 방안을 여러가지 방면에서 찾아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응방안없이 수입의 물결이 축산업을 휩쓸 때, 그 충격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책당국뿐만 아니라 양축가들도 긴장감을 고조시키면서 외국의 축산과 경쟁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물론 10여년의 양축경험을 가진 축산인들에게 수백년의 경험을 가진 외국의 축산인들과 싸우라고 말한 사람이 가혹하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 어디 축산분야 뿐이겠는가. 공업분야에서는 이미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오래 되었다.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생산자의 종말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는 지금 미국의 농업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어림잡아 네 농가당 한 농기

가 파산선고를 내고 있는 것이 미국 농촌의 현실이다. 이들 파산농가는 대부분 곡물값이 올라갈 때 무리한 투자를 했던 경험 적은 농가들이다 농업생산이 유리한 미국에서도 농민들의 고통이 이루 헤아릴 수 없는데, 하물며 그들보다 훨씬 비싼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농민들로서는 피나는 노력이 요구되지 않을 수 없다.

양축가들은 하루속히 사육규모를 적정수준으로 늘리고, 사료생산기반을 확충함과 동시에 사양관리를 대폭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생산원가를 낮추고, 우량한 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함으로써 태평양 건너 들어온 외국산 축산물과 떻떳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외국산 축산물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관세가 붙을 것이고, 또 관세 이외의 장벽까지 있게 될 것이므로 외국의 축산과 경쟁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두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문제는 우리 양축가들에게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느냐 하는데 있다. 생산성 향상이란 것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나 양축가 모두가 축산업을 성장산업이라는 시각에서 보고,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아갈 수 있게끔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옮길 필요가 있다.